



【검토보고서】

2018.12.18.(화)
제300회 정례회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김유연】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 제안자 : 안순덕 의원 대표발의
- 제출일 : 2018년 11월 20일

2.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여 동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가.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복지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나. 동물의 등록에 대한 세부사항과 등록대행자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6조)
- 다.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8조)
- 라.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조치사항 (안 제9조 ~ 안 제13조)
- 마. 동물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4조)
- 바. 등록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나. 입법예고 : 2018. 11. 27. ~ 12. 2.(5일) 예정

5. 검토의견

가. 조례개요

- 1인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안순덕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 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 지정, 유기·피학대동물에 대한 조치사항 등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례의 구성]

구분	조례안	주요내용
제1조	목적	조례의 목적
제2조	정의	조례상 용어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의 책무 규정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복지를 위한 계획 및 실태조사 관련 사항
제5조	동물의 등록	동물등록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지정의 취소	등록대행자의 취소사유에 관하여 규정
제7조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제8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및 지정취소	동물보호센터의 감독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제9조	유기동물 등의 포획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포획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제10조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사항
제11조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유기동물에 대한 조치 사항
제12조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피학대 동물에 대한 조치사항
제13조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조치에 대한 경비 징수
제14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동물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제15조	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	장애인 보조견 및 유기견 입양등 수수료 감면사항
제16조	시행법 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함
부칙	제1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경과조치)	시행 이전 유실동물 및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나. 주요내용

1) 목적 (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여 동물의 복지 증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인가구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양주시도 동물보호에 관련된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유실·유기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임

[동물보호 민원현황]

연도	합계	상담민원	당직민원	전화민원	비고
2016	158	30	25	103	
2017	309	70	33	206	
2018	402	85	53	255	9월기준

2) 정의 (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피학대동물”이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4.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노력과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5. 개체식별장치”란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생체 주입형 “마이크로칩” 또는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인식용목걸이(전자태그)를 말한다.

- 유실·유기, 학대동물, 등록대상동물 등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일부 정의된 사항이 포함되어있지만 시민들의 명확히 이해를 돕고 조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용어들을 정의함.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 동물학대행위(안 제2조제2호)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동물보호법 시행령] - 등록대상동물(안 제2조제3호)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3)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동물보호정책 추진 및 정책수립시 시민의 참여보장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4)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안 제4조)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실·유기동물 및 학대 받은 동물에 관한 사항
3.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동물보호법」에서는 국가가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 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적극협조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의 상황에 맞는 별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동물의 등록 등 (안 제5조)

제5조(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동물의 등록 업무를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보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안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안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의 주소 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상위법령에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등록규정과 동일함.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3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물의 등록 업무를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사항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안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안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법 시행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제4조(동물의 등록사항 변경)** ①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는 법 시행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는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현재 우리시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총 8개소임

[동물등록 대행기관 현황]

연번	병 원 명	소 재 지	대표자
1	광적동물병원	광적면 가래비길 39	이홍균
2	백석동물병원	백석읍 꿈나무로 163	전태문
3	김 동물병원	광적면 광적로 119	김광섭
4	로알종합동물병원	고암길 58	심준수
5	안민동물병원	은현면 은현로 73-8	안중옥
6	해맑은동물병원	부흥로 1890	김기원
7	반창꼬동물병원	평화로 1551, 2층	박상용
8	덕정동물병원	회정로 120, 101동 1호	문경록

6) 지정의 취소 (안 제6조)

제6조(지정의 취소) ① 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을 받고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지정·해지한다.

③ 법령, 동물등록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별도로 지정의 취소에 대한 상위법령은 없어 지정의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등록대행자의 원활한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시행법 시행규칙] -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5.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는 등록대상 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소속 수의사(지정된 자가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

7)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정, 지정취소 등 (안 제7조 ~ 안 제8조)

제7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고, 직접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을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고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적합여부 평가 후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보호센터 감독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연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7항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상위법령 인용의 공고방법 및 기간, 재지정, 복수지정 등 시군구에서 정할 수 있는 지정과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음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법 시행규칙]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4.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4의 지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 및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직접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은 법 시행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별표4를 충족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다만,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8) 유기동물 등의 포획 (안 제9조)

제9조(유기동물 등의 포획) ① 시장은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포획하여 보호 조치한 때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동물보호법」 및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동일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시행법 시행규칙]

제8조(동물의 포획) ① 시장·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공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다른 방법으로 게시하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9) 유기동물 관련 조치사항 (안 제10조 ~ 안 제11조)

제10조(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7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획한 유실·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보호·관리 중인 유실·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3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입증명을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분양, 기증 및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분양받는 자는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⑥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위법령에서 유기동물 기증·분양 등의 절차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경기도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함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0)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소요경비 지급기준 (안 제12조)

제12조(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학대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소유자는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 납부하며**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 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 귀속된 경우 해당동물은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기증 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3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다.

○ 피학대 동물의 보호 의무와 소유자로부터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보호비용산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시도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를 따름 (별표1)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

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20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1]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기타	-	해당동물의 생태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장이 정함

나. 인건비

① 포획비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

다. 일반운영비 :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비용

가.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11)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안 제14조)

제1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2) 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 등 (안 제15조)

제15조(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 등) 법 제42조에 따라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수료 감면 대상항목이 중복된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100분의 50
3.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범위 이내

○ 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은 상위법령에서 시도에 위임한 사항임.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려는 자
3.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하려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수수료의 감면) 법 제42조에 따라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항목이 중복된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장애인 보조견 :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100분의 50
3. 시장·군수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범위 이내

13)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안 제16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 종합의견

- 1인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안순덕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된 사항 및 시·도에 위임한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조례안이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 현재 경기도 내 19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 상황에 맞는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보호센터 설치,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기도 내 조례 제정현황]

순번	법령명	시군명	공포일자
1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2017. 7. 17.
2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광명시	2018. 2. 27.
3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광주시	2015. 7. 24.
4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김포시	2009. 10. 12.
5	남양주시 동물보호 조례	남양주시	2009. 9. 24.
6	동두천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2016. 4. 11.
7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천시	2016. 6. 13.
8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성남시	2015. 4. 13.
9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수원시	2016. 6. 14.
10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흥시	2016. 2. 12.
11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안산시	2017. 7. 25.
12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양시	2017. 7. 13.
13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	오산시	2016. 7. 19.
14	의왕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의왕시	2010. 3. 30.
15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2018. 9. 20.
16	파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파주시	2009. 11. 13.
17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평택시	2018. 11. 9.
18	포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포천시	2016. 3. 16.
19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하남시	2015. 10. 5.

[참고자료]

등록대상동물(반려견) 소유자의 의무/위반시 처벌근거(발췌)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2018. 3. 20.>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9조제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 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 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 2의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 2의6.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1. 삭제 <2017. 3. 21.>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4. 삭제 <2017. 3. 21.>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6. 삭제 <2017. 3. 21.>
7. 삭제 <2017. 3. 21.>
8.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11.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
12.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13.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
14.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15.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8. 3. 2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소유자등이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2호	10	20	40
다.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3호	10	20	40
라.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마. 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5호	20	40	60
바. 소유자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1호	10	20	40

사.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	10	20	40
아.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3호	5	10	20
자.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4호	20	30	50
차.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4호	5	7	10
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300	
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100	200	300
파.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00	200	300
하.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8호	30	50	100
거.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9호	30	50	100
너. 영업자가 법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	30	50	100
더.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1호	20	40	60
러.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2호	20	40	60
머.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3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3호	30	50	100
버.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4호	20	40	60
서. 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 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5호	20	40	60